

KMI 동향분석

VOL.103

2018 DECEMBER

발간년월 2018년 12월(통권 제103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현대송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센터장
(hyun@kmi.re.kr/051-797-4785)

최지현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김선미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smkim@kmi.re.kr/051-797-4746)

중국은 해양굴기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해양진출정책으로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양입국을 내세우며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관할권 확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및 중국과의 해양경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독도, 이어도 등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과 안보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안보적 위협 요소는 대부분 ‘해양’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주변 해양세력들과 총력을 다한 각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해양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해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반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단체인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 산하의 해양정책연구소(OPRI, 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를 운영하며, 해양안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기관 산하의 해양·해사법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주도로 국제법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Law)를 설립하여 싱가포르 국익에 직결된 해양법 및 국제법 관련 국책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Maritime Institute of Malaysia)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국내외의 해양현안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고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도 시급히 해양을 둘러싼 정세 악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도 및 이어도, 동해표기, 어업협정, 불법어업, 해적, NLL, 대륙붕, 심해저, 공해, 북극해, 자유항행, 국제해양환경규범 등 다양한 해양법 및 해양안보 과제, 특히 한중, 한일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협정, 동중국해 대륙붕 확장 문제 등 한반도 주변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시적

인 대응 기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 연구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경계획정, 심해저, 대륙붕 등에 관한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국제법 및 해양법 전공자가 격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국의 이익이 침해하게 대립하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협정 및 국제수산규범,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요인에 대응하며 우리나라의 해양권익을 보전·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양법·해양정책·해양안보 및 해양규범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즉 ‘한국해양법연구소(가칭)’와 같은 싱크탱크를 설립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법연구소’가 설립되면 해양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법률자문 및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양법과 국제규범 관련 연구기능 확대를 통하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연구 및 자문,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자문, 남북한 해양협력 및 해양거버넌스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설립 시에는 해양수산 정책연구 및 전략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해양 관련 국책연구기관, 즉 KMI와 같은 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MI의 국제규범 관련 연구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해양수산 부문의 국제법과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비용 없이 정부의 종합적인 해양정책 지원기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1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한국해양법연구소’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 해양 갈등 증대 추세

■ 냉전 종식 후 해양질서 변화로 인한 해양 갈등 증대

- 냉전 종식과 '82유엔해양법협약 발효(1994) 후 각국은 해양관할권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음
 - * 20세기 초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원에 제기된 해양경계 및 도서 관련 총 45개 사건(국제사법재판소 20건, 중재재판소 23건, 국제해양법재판소 2건-잠정조치포함) 중 냉전 종식과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후인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사건이 24건으로 전체의 과반을 초과
-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자국 영토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해양영토 문제가 민족주의와 결부됨으로써 EEZ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어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함
 - *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국가의 권리를 경제적인 면으로 한정된 국제법 정신과 일반인 간의 인식의 괴가 큼으로 인해 법에 바탕을 둔 합리적 해결책 모색이 어려운 실정임

■ '해양굴기(海洋崛起)'로 미국의 해양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과 '해양입국(海洋立國)'으로 국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해양 경쟁 격화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양진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안 인근에서 지속적인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의 해양진출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 중임
 -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의 관여 증대와 국제법원을 무대로 미중 법률전(法律戰, lawfare)이 심화됨
- 일본은 안보법제 개정, 헌법 개정 시도 등을 통하여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8년 5월 15일, 제3기 해양기본계획(2018-2022년도)을 각의결정. 향후 10년간 일본 영해 등에서의 국익의 확보, 일본의 중요한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확보, 해양이용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국제해양 질서의 현상유지 강화를 기도하고 있음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영토교육을 강화하고,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한·중·일 간 해양영토 확보경쟁 치열

- '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확대되었으며 한·중·일은 국내법을 통하여 이를 수용했음
 - * 152개 연안국 모두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시(현재 132개국 선포), 해상의 36%, 주요어장의 90%, 석유매장량의 90%가 연안국에 귀속됨

표 1. 한·중·일 3국의 유엔해양법협약 수용 및 관할권 선포 현황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1996.1.29	1996.6.7	1996.6.20
심해저 이행협정 비준	1996.1.29	1996.6.7	1996.6.20
영해	12해리 (일부지역: 3해리)	12해리	12해리 (일부지역: 3해리)
접속수역	24해리	24해리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시행	1996.9.10	1998.6.26	1996.7.20
직선기선 시행	1978.4.30	1996.5.15	1997.1.1

자료: http://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chronological_lists_of_ratifications.htm 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 간 해양 폭은 양안거리는 400해리 이하로, 해양관할권 확대 경쟁으로 인한 외교 갈등이 빈발하고 있음

* 한중일 잠정 해양외교 현안: ①독도 영유권과 주변해역 관리, ②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처리, ③이어도의 법적 지위, ④한중, 한일 어업협정과 EEZ, ⑤중국의 직선기선 기점 설정, ⑥중국 어선 불법어업, ⑦해양쓰레기 등 오염문제 ⑧수산자원 남획

■ 한반도 주변의 갈등과 안보 문제는 대부분 ‘해양’에서 기인

- 동아시아 영토 분쟁은 모두 도서 영유권 분쟁(라일 간 쿠릴열도, 중일 간 조어도 등)이며, 동남 중국해에선 분쟁 심화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됨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으로 촉발된 동중국해 상공의 군사적 긴장도 결국 중일 간 조어도를 둘러싼 해양갈등이 원인

- 한국도 NLL과 서해 5도 주변에서의 무력 충돌, 일본 및 중국과의 해양경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독도, 이어도 등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과 안보 문제가 해양에서 기인함

- 최근 남북 간의 화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기존의 해양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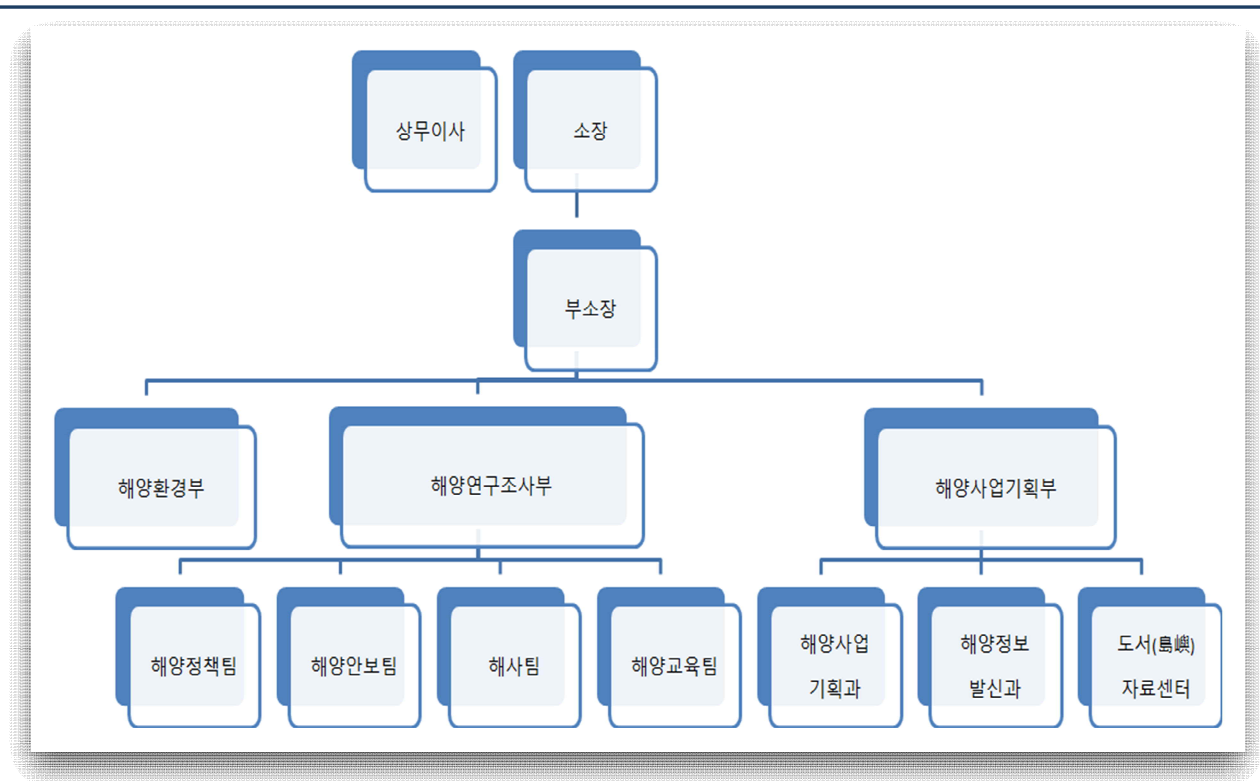
* 공동조업, 항만 등 인프라 개발, 해운활동 확대 등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해역 이용지도가 변화함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주목 필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양안보 대응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기반 급속히 강화 중

■ 일본은 민간단체인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 산하의 해양 정책연구소(OPRI, 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해양안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

- OPRI의 전신인 ‘해양정책연구재단’이 2002년부터 해양정책연구, 정책 제언, 정보 발신 등을 실시하는 싱크탱크로 활동을 시작함
-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후 해양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기본법이 정한 기본 시책의 구체화 및 실시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함

그림 1. 일본 OPRI 조직도



자료: https://www.spf.org/_opri/profile/organization.html

* 최근 조직개편으로 해양교육팀이 해양사업기획부 산하로 이동. 해양조사연구부와 해양환경부가 '해양정책연구부'로 통합

-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8.5. WMU-Sasakawa Global Ocean Institute를 설립하여 해양정책, 해양법, 해양과학 등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동 연구소는 Ronan Long, Clive Schofield, Momoko Kitada 등 저명한 해양법 및 해양정책 전문가들을 연구진으로 고용함
- 향후 연구소를 통해 우리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해양문제에 대한 저술활동이 예상되며, 국제학술분야의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표 2.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재정지원으로 고용된 WMU 교수진

이름	직책	국적
Momoko Kitada	Associate Professor	일본
Ronan Long	Director, Global Ocean Institute and Nippon Foundation Professorial Chair of Ocean Governance & the Law of the Sea	아일랜드
Michael Ekow Manuel	Associate Professor, Head, Maritime Education & Training and Head, English and Study Skills Programme	가나
Aykut I. Ölcer	Nippon Foundation Professorial Chair of Marine Technology and Innovation, Head, Maritime Energy Management specialization, Editor-in-Chief of WMU Journal of Maritime Affairs (JOMA) and Book Series, Programme Coordinator, PG Diploma in Maritime Energy	터키
Laura Carballo Piñeiro	Professor, Nippon Foundation Chair of Maritime Labour Law and Policy	스페인
Murray Rudd	Nippon Foundation Professorial Chair of Sustainable Marine Management and Ocean Governance	캐나다

자료: 저자 작성

■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상반기부터 정부기관 산하에 해양·해사법센터 설립 추진 중

- 해사 사법권을 중국 관할 전 해역으로 확장하여 중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 중국 중심의 국제해사사법센터 설립을 통해 각 해사법원의 사법수준 제고 및 국제해사사법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 또한 남중국해 중재판정 패소 이후('16) '국제규범 수범자'에서 '국제규범 형성자'로의 전환을 시도함

■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 주도로 국제법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Law)를 설립하여 싱가포르 국익에 직결된 해양법 및 국제법 관련 국책과제 수행

- 2008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영토분쟁 사건을 계기로,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법 전문성과 역량 강화 증진을 목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산하에 국제법센터를 설립함

- 중점 연구 분야는 1) 해양법정책, 2) ASEAN 법정책, 3) 국제투자법정책, 4) 국제분쟁해결, 5) 핵 관련 법정책이며, 이외에도 남중국해 분쟁, 해양환경, 해저케이블, 극지연구 등 싱가포르 국익에 직결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총 50명의 연구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현직 ICJ, ITLOS 재판관과 전 세계 유수의 학자 및 정부 관료들을 센터 자문 위원으로 두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Maritime Institute of Malaysia)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국내외의 해양현안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

- MIMA는 말레이시아 국내, 남중국해 지역, 국제적인 해양 현안에 관한 자문과 연구를 수행함
- MIMA는 1) 해양법정책센터, 2) 해양안보외교센터, 3) 해양환경 연구센터, 4) 말라카해협 연구센터, 5) 해양경제산업 연구센터로 조직되어 각 분야의 해양문제에 관한 연구, 자문 및 정책지원 활동을 수행함

표 3. 주요 국가의 해양 종합연구기관 현황

	일본 해양정책연구소	중국 해양해사법센터	싱가포르 국제법센터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
유형	민간단체	정부기관 산하로 추진 중	국립대학 산하 연구소	국책연구기관
설립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류와 해양의 공생”을 목표로 설립 실제로는 일본의 ‘해양 입국’을 위한 해양정책 연구, 정책제언, 정보 발신 등을 실시하는 싱크탱크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사 관련 사법권을 중국 관할 전 해역으로 확장하여 해양권익 보호 중국 중심의 국제해사 사법센터 설립을 통해 각 해사법원의 사법수준 제고 및 국제해사사법 연구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말레이시아와의 영토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법 연구 증진을 위해 설립 싱가포르 정부부처로부터 재정자원을 받아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법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 해양기본법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 수행 해양기본법에 따른 기본 시책의 구체화 및 실시 활발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해양전략과 해양 정책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중국해, 북극연구, 해양환경, 해저케이블 등 싱가포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연구사업 수행 해양법 및 해양정책, ASEAN 법정책, 국제 무역투자 법정책, 국제 분쟁해결을 중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법정책, 해양안보 외교, 해양환경, 말라카 해협, 해양경제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조직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 38명 2016년 예산 총액: 약 5억 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 50명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 28명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 예산 일부 지원

자료: 저자 작성

해양권의 보호를 위해 국제 해양규범의 종합적·체계적 법률 및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신설해야

■ 해양을 둘러싼 지역 내, 지역 간 갈등 심화와 국익침해 가능성 대비

- 동북아 지역의 해양을 둘러싼 정세 악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 독도 및 이어도, 동해표기, 어업협정, 불법어업, 해적, NLL, 대륙붕, 심해저, 공해, 북극해, 자유항행, 국제해양환경규범 등 다양한 해양법 및 해양안보 과제가 동북아 및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등장함
 -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 TPP, RCEP, 극동러시아개발계획 등 경제협력 기반의 지역 경쟁 구도 속에서 마일·중리 간의 해양에서의 대립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국익 보전 및 증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심화로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 등 기간 해운물류루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됨
- 한중, 한일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협정, 동중국해 대륙붕 확장 문제 등 한반도 주변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대응 기반 강화가 필요함
 -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관련 국제판례와 해양법에 관한 상시적인 해양법 자문을 대외비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추적권 행사, 처벌 등 국제법 및 국내법 문제와 수산업에 영향을 주는 국제수산기구의 국제법규에 대한 상시적 자문이 필요함
 -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의 동중국해 200해리 밖 대륙붕의 외측한계 확장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함
 - 2028년 종료 예정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종합적인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정책지원 토대 강화 필요

- 분산적인 독도연구의 체계화, 심해저 및 대륙붕 전문가 후속 세대 양성, 어업협정 및 국제수산규범 대응 및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기반 강화, 한반도 평화여건 조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KMI는 2006년 독도연구센터를 개설하여 독도 및 국제해양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5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독도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정책의 틀에서 경제·사회·인문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연구 및 대응 기반을 구축 중임

- ※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자연과학 기술과 연계된 해양정책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해운·항만·수산정책을 포함한 경제·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해양법·해양정책·해양안보 및 해양규범에 관한 법률자문 및 정책자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양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북한 간의 국제해양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견적 지식기반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더욱 거세질 해양수산 분야 국제법 수요와 이를 지탱해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갈 해양 영토 및 해양안보 분야 통합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대내외적으로 해양법 및 해양정책 전문가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국제법 및 해양법 전공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해양규범과 관련된 국내 인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대응 역량을 동시에 실현하는 종합적인 조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법률자문 및 정책지원을 위한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함
 - 우리나라 해양영토 현안인 독도 문제, 동해표기 문제, 이어도 문제 등에 관한 국제해양법 자문과 정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함
 - 해양영토 문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해수부와 외교부 등 담당 부처와 함께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함
 - 해양경계획정, 어업협정, 불법어업 등에 관하여 일본 및 중국과 빚고 있는 해양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연구 및 자문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외교부, 해경, 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등 여러 부처들과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해양협력 및 해양거버넌스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함
- 해운, 수산, 해양환경 협력을 통한 남북한 해양협력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함
- 심해저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호, 국가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 공해어업, 남중국해 해양 분쟁 등과 같이 세계 해양 거버넌스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함

KMI 부설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으로 국제규범관련 연구기능 확대 및 적극적 정부정책 지원 가능

■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최신 국제동향 분석 연구를 통해 국가 이익 수호방안을 마련

- 급변하는 국제 해양정세와 국제해양법의 변화 및 발전상황에 관한 국제동향의 조사,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함
 -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해양법 발전 상황에 관한 국제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
 - 우리나라의 해양법 및 해양정책 현안문제들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국제재판소의 판결, 국제기구의 결정과 활동, 주요 국가들의 실행에 관한 동향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당 정부부처에 적기에 제공함
- 최신 국제해양법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함
 - 우리나라가 직면한 각 해양법정책 문제들에 관련된 국제조약, 국제판례, 국제기구의 결의, 국가실행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함
 - 국제해양법과 해양질서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립하고 그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해양법정책을 수립함
 - 해양법·정책 현안들은 2-3개 이상의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법 자문 및 정책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활동함
- 분산된 해양규범에 대한 정책 지원체계를 체계화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
 - 주요 해양수산 국제규범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외 핵심적인 기관 또는 석학과의 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국가 이익 수호방안을 마련함

■ 해양수산 정책연구 및 전략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KMI 산하 부설연구소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KMI가 보유한 관련 연구기능을 확대개편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체로 운영함
 - 기존의 연구조직을 해양법연구센터·독도연구센터·남북극 및 대양연구센터·국제해사연구센터·국제수산규범연구센터 등의 기능으로 확대하여 해양수산부문의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연구, 정책지원함
 - 기존의 독도연구사업, 북극해사업, 대륙붕사업 이외에 수산문제를 포함한 해양법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자체 연구사업을 발굴함
 - 세계 수준의 연구기능을 갖추기 위해 해외연구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책연구기관인 KMI의 국제규범관련 연구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해양수산 부문의 국제법과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지원기능 구축

- 독도연구센터는 2006년 설립이후 80여 편의 연구보고서, 50여 차례의 국제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활발한 독도 및 해양법 관련 연구활동 실시 중
 - 현재 UN해양법국(DOALOS),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버지니아대 해양법·정책연구센터, 에게해연구소 등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수아카데미, 글로벌 오션 레짐 포럼을 운영하는 등 국제적으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추진 중
- 극지연구센터는 2014년 설립이후 20여 개 연구과제, 20여 차례의 국제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0여명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북극정책연구분야의 허브로서 성장 중
 - 현재 EWC(미), FNI(노), NArFU(러), Arctic Center(핀), SIIS(중), 북해도대학(일), 북극이사회 등 핵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NPAC, NPARC 등을 주도하여 운영 중
- 해사안전연구실은 IM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해사규범 관련 정책대응을 추진 중
 - IMO와 관련된 해양에서의 해사안전, 해양사고 긴급대응,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
- KMI의 해양수산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역량과 국제적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국제해양법에 관한 상시적 법률 자문 및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향후 국제수산규범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국제해양규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반을 강화해야 함

그림 2. 한국해양법연구소 조직도(안)



자료: 저자 작성

한국해양법연구소가 추진해야 할 주요의제 및 대응 방안

■ (독도) 일본의 독도 공세 강화에 대응하여 해양안보전략 차원의 독도정책 시행 필요

- ‘12년 8월 이후 일본의 독도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
 - 우리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주권행사 저지를 위해 ‘분쟁화’ 시도와 국제 홍보 및 영토 교육 강화로 한국의 ‘불법 점거’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외무성에 국제재판대책실을 설치하는 등 해양정책과 연계하여 제도와 조직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일본 안보법제 개정과 해양기본계획 수립, 주변국가의 동해해역 활동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해양안보전략 차원에서 독도정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부유 시설물 설치 및 활용, 관광객 편의시설 강화, 국제 관광프로그램 개설, 사료 조사 및 수집 강화, 해양과학조사로 독도 데이터 축적, 해양영토 공간정보의 입체적 관리, 해외 국제법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등 영유권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동해 명칭) 동해 병기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제적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공동연구 실시, IHO 활동 강화 등으로 집중 대응

- ‘17년 제1차 IHO 총회에서 우리 정부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위한 다자간 ‘비공식 협의체’ 제안, 3년간 활동 후 차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음
- 유엔지명전문가집단(UNGEGN)과의 네트워킹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며, 해외동포 단체 등과 연계하여 ‘East Sea’ 병기를 위한 체계적 홍보를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해 병기의 정당성을 입증할 새로운 논거 개발,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지명병기 원칙의 부각, 전자해도 기반 기술 발전 성과 도입 및 개도국 전자해도 기술 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 Wikipedia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동해 병기 인식 확산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어도) 중국 정부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한·중 해양경계 협상의 대상수역에 이어도를 포함해 협상하되 외교쟁점화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 중국 정부는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반대, 2013년 11월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음
 -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2.27.) 이후 관계 진정, 남북 정상회담 국면(4.27.)에서도 이어도 상공위를 넘어 동해까지 정찰기를 파견 중
- 2012년 3월, 중국 국가해양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장은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정기적인 순찰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언했으며, 중국은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교섭에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의 조정 및 관리 방안 마련, 한·중·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위기관리를 위한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EEZ 경계획정) 개별적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전체 해양경계획정을 목표로 하는 유기적·종합적 대응책 마련 필요

- 한중 어업협정, 한일 어업협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개별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체 해양경계획정을 목표로 유기적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한중 어업협정에서 중국의 우리 측 입어 문제를 우리나라 해양자원의 보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추후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협상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방안, 재판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방안 이외 새로운 경계획정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함

* 2017년 동티모르-호주는 해양경계획정을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 절차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완수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 전반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수립 필요

-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A) 체결 이후 '90년대 초까지 협력을 이어 왔으나 이후 일본 측의 거부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협정 종료 시까지(2028년) 공동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매년 개최되는 한일 공동위원회(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4조)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행을 촉구 중임
- 현재 협정 이행 촉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해양경계획정 및 한일 관계 전반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검토가 필요함

■ (한일 어업협정) 한일 간 어업분쟁을 국제소송에 회부하고, 제3국들을 포함한 지역수산기구 설립방안 검토 및 추진 필요

- '16년 7월 협상 결렬 이후 9차례 실무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획할당량 및 우리나라의 연승어선 입어척수 제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의 EEZ에서 조업하지 못함으로써 대형선망 400억 원, 중형저인망 50억 원 가량의 어획손실이 추정됨
- 한일 어업협정은 양자 어업관계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 동해 해양경계획정, 한일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해수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합동대응이 필요함
 -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협상에서 논의되는 대외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외부 해양법 전문가의 정책지원이나 법률자문이 곤란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움
- 한일 어업협정 제13조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 근거, 한일 간 어업분쟁을 국제소송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간 외교관계의 악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중국 및 러시아 등 동해에서 조업하는 제3국들을 포함한 지역수산기구 설립방안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함

■ (한중 어업협정) 해양경계획정 협상전략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한중 어업관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후 양국 간 어업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회담을 통하여 2000년에 이르러 한중 어업협정이 정식 체결됨
-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우리 해경의 공무집행 방해 등 어업 갈등이 지속 중임
 - 상호 입어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중국의 불법어업이 우리나라 영해와 EEZ 등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불법어업은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어업분쟁이 해상충돌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음
- 한중 어업 문제는 진행 중인 해양경계획정 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계획정 협상전략과 연계한 장기적인 한중 어업관계 수립전략이 필요함

- 해양경계획정 체결 이후에도 어업관계 규율체제 및 남북 간 수산협력 증진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 한중 공동 해양공간계획(MSP)을 수립하고, 어업, 환경, 자원 보존 및 개발 문제 등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임

■ (동중국해) 동중국해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종합적 해양안전보장 차원에서 동중국해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이익 확보를 위하여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12년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가 보류 됨’(13년)
- 중국은 CLCS 정보 문서 제출, 센카쿠/다오위다오 인근 선박 집단 출몰 등을 통하여 공세적 대응을 하고 있음
 - 2008년 중·일 양국은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나 이행되지는 않았으며, 중국 역시 CLCS에 대륙붕 연장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했으나(‘12년) 일본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됨
 - * 중국이 대륙붕 연장을 신청한 해역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과 중첩되며 중국이 이 수역에 대해서 자신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동중국해 해저자원개발과 대륙붕 연장 문제, 해상교통로(SLOCs)의 안정적 이용 확보 문제 등 개별 사건별로 대응하기 보다 종합적 해양안전보장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동중국해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등에 대비한 우리나라 동아시아 해양안전보장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남중국해)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주변국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관계 다변화 전략 수립 필요

-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로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의 국면 전환을 시도 중임
 - 중국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관련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17년 5월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규칙 초안에 서명함
 - 남중국해 행동규칙 초안은 추상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행동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임
- 우리 정부는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해양 분쟁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확보를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함

-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안보, 해양법정책 및 해양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관계 다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국가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 BBNJ는 해양관련 전문가들의 집단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 협력을 위한 구심적 확보 필요

-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규범 정립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대립 구도가 고착됨
 - 유엔총회에서 기존 해양법체제하 새로운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문서 성안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채택함
 - 새로운 BBNJ 문서 성안에 대해 공해자유원칙에 따라 규율(선진국) vs 새로운 법체제 필요성(개도국) 이 대립 중임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새로운 이행협정이 채택될 예정임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총회결의(A/RES/72/249)를 근거로 최종 권고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기존 해양법체제의 수혜국으로서, 공해자유원칙에 따라 규율해야한다는 입장임(현행 해양법체제 유지 입장)
- BBNJ의 경우 해양생물학, 해양학, 국제협력(개도국 지원), 해양법 등의 전문가들의 집단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 협력을 위한 구심적 확보가 절실함
- 향후 조약문 채택 협상 및 이행 단계를 겨냥해서 지속적인 대비책 수립, 장기적인 협상 과정에 대비하여 관련 정보 구축과 4가지 논의 주제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필요함

■ (심해저) 심해저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육성 정책 수립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필요

- 국제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주도 하에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논의가 진행 중임
 - 망간단괴(2000), 해저열수광상(2010), 망간각(2012)에 대한 탐사 규칙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업개발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상태이나, 광물의 시장 가격이 본격 상업개발 시기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함

- ISA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심해저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육성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사업 추진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상업생산에 대비한 투자 육성 정책 수립 및 법률 지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극지)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회 설치를 통해 규범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

- 2017년 1월 극지 운항 선박이 준수해야 할 강제사항이 포함된 Polar Code가 발효됨
 -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라 쇄빙선 건조 실적 및 국내 선사의 운항회수 증가가 예상되나, 안전조치와 환경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규정이 마련되어 해당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극지 운항이 가능해짐
-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협상 타결과 남극해에서의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등 남북극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규제 움직임 있음
 - 해빙으로 생기는 새로운 어장에 대비, 북극 중앙해에서의 상업적 어업을 금지하려는 연안 5개국(미, 러, 캐, 덴, 노) 및 비연안 5개국(한, 중, 일, 아이슬란드, EU) 간 협상이 2017년 11월 합의, 2018년 중 서명 예정임
 - 2017년 12월 남극 로스해 해양보호구역(155만 km²) 발효로, 72%의 지역에서 어업행위가 금지, 28%의 지역에서도 과학연구를 위한 어류와 크릴 포획만 허용, 현재 남극 웨델해 해양보호구역(180만 km²) 지정을 논의 중임
-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 구축, ‘북극 규범화 협의회’ 설치를 통해 북극이사회, 국제해사기구 및 기타 지역정부 간 협의회를 통한 규범화에 대응이 필요함
- 극지구조·구난 및 환경보호 관련 국내법 및 규정 제정, 북극 공해 어업협정 대응 체계 구축, 「극지활동진흥법」에 근거해 극지운항 안전관리 시스템, 2048년 남극조약 종료 이후 및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관련 정책연구가 필요함

■ (공해) 새로운 공해어업 규범과 국제법의 발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법 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 해양법정책 기관 필요

- 공해 어업자원 고갈로 국제적 공해 어업규범 강화 추세임
 - 공해 어업질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이행협정인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 1993년 FAO 이행협정 등을 통해 보완·발전 중임

- IUU어업 관련 국제수산물규범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가 필요함
 - IUU어업 방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정책 및 이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해어업 관련 지역수산물규범과 국제법의 발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법 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해양법정책 기관이 필요함
-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과 같은 새로운 공해어업 규범의 등장에 대비한 원양산업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 불법어업) 불법어업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를 위한 남북 및 한일 간 공동대응 방안 수립 및 지역수산물기구 설립 추진 필요

-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연간 10만 척으로 추산되며 주로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 수년간 동해로 진출함
 - 상호 입어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중국의 불법어업이 우리나라 영해와 EEZ 등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불법어업 선박에 대한 단속과 법집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체계적 법률자문이 부족함
 - 중국 불법어업 선박에 대한 단속은 해수부, 해경, 외교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나 정보공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집행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함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협상에서 논의되는 대외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외부 해양법 전문가의 정책지원이나 법률자문이 곤란, 적기 대응이 어려움
-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중간수역과 남북 간 해상경계 부근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남북 및 한일 간 공동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함
- 한중, 한일, 중일 등 동북아 지역에 있는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동북아 해역에서 빈발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지역수산물기구 설립 추진이 필요함

■ (해적) 해상범죄 대처 관련 국제기준 및 국제법 검토를 통해 국내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와 무장강도가 증가 추세로, 현재까지 선원 91명이 인질로 억류되고, 75명이 납치됐으며, 3명이 살해되고, 6명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행위는 다소 줄어든 반면, 기니만 인근 해역과 동남아 지역에서 해적행위가 급증함

* 2017년 소말리아 인근(7건), 기니만(53건), 인도네시아(43건), 필리핀(22건) 등 전 세계적으로 총 180회 발생

- 해적 활동 영역 확대 및 조직화·홍포화로 한국 선박도 해적 피해를 입음
- 해적행위의 퇴치 및 근절을 위해 UN, ASEAN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결의 및 실행계획, IMO가 발간한 해적대응요령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적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 노력 중임
- 해적피해 예방책, 해적 피해 발생 시 협상전략, 해상테러 및 해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기준 및 국제법 검토가 필요함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해적 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제해양환경규범) 국제해양환경규범 및 환경소송 증가에 대비하여 한국의 해양 주권 및 권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 필요

-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파괴 등 해양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국제 해양환경규범이 증가하는 추세임
 -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사건, 가나-코트디부아르 경계획정 사건 등에서 해양환경 보호 문제가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인용되고 있음
- 세계 해양에서 해양보호구역 설정 확대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각국은 환경적 기반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확대하며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
- 해양쓰레기, 부영양화, 해양 구조물 건축 등 해양산업 전반에 걸친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 방안, 해양환경에 관련된 과학적 조사, 해양오염 감시 및 자료 교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정보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의 증가 추세가 한국의 해양 주권 및 권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해양관리) 주변국과의 접경 수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및 북한과의 해양 어족 자원 공동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후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에 대해서 논의함
 -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하고 어업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음

-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엔 제재는 계속 될 전망이나, 유엔 제재 하에서는 적극적인 남북협력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유엔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남북 해양수산협력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유엔 제재 해제 이후 해양 수산·해운·항만 등 분야별 협력 방안 마련 등 종합적 해양수산협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현재 남북한 대립으로 상대적 소홀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접경 수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우리나라 해경 및 해군과 북한 법집행 선박이 공동으로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양 어족 자원 공동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이후 이 지역에서 미중 간 및 중일 간의 패권 경쟁을 중화시킬 수 있는 남·북·미·중(추후 일러 포함) 해양협력체제 구축 방안, 남북한 관계 관련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개발 투자 늘려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URL: https://www.kmi.re.kr/	